

주간 WEF 브리프 · WEF 신호로 읽는 산업·정책 · 11호

대기업의 공시가 중소기업의 숙제가 된다

가치사슬 배출량 공시가 2031년에 시작된다

WEF가 9월 15일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 아웃룩** 창간호를 냈습니다. 대기업 지속가능성 책임자 103명에게 묻은 설문입니다. 원문 12쪽이 꼽은 과제는 **국내 제도의 일정과 겹칩니다** — 역량을 대기업 밖 공급사와 중소기업까지 넓히는 일입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8일 공시 의무화를 **2028년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로 확정하고, 가치사슬 배출량(스코프3)은 **3년을 유예해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시 시작 2028년 · 스코프3 2031년

2029년 공시 대상 상장사 3,171곳

공시는 상장사, 자료 요청은 협력사

국내 공시 의무화 일정 — 금융위원회 최종안(2026. 7. 8.)

2026. 7. 8.금융위
제도화 방안
최종안 공개**2028년**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291개사**2029년**5조원으로
확대,
3,171개사**2030년**제3자
인중 의무화
, 2조원 확대
검토**2031년**스코프3
적용 시작 —
협력사 배출량

붉은 칸이 협력사 자료가 서류에 들어가는 해다. 근거인 금융위 최종안은 III·IV장 5~6면에 있다.

이 브리프에서 다루는 것

- 1 요구는 커지는데 인식은 더 느리다 · I장
- 2 원문이 지목한 약한 고리 — 중소기업 · II장
- 3 국내 공시 일정과 스코프3 · III·IV장
- 4 도내 중소기업 900개사가 답한 애로 · V·VI장
- 5 측정과 보고·적응·제도 분화 · VII~IX장 / 함께 볼 것 · X·XI장



원문 보고서 표지 · World Economic
Forum
Centre for Nature and Climate ·
2026년 9월

이벤트 요약

발행일자	2026. 10. 1. (목)	원문 게시	2026. 9. 15. (WEF 발간물 페이지)
원문	World Economic Forum 「Chief Sustainability Officers' Outlook」(Insight Report, 2026년 9월, 25쪽, Centre for Nature and Climate). 창간호이며, 커뮤니티 189명 가운데 103명의 익명 응답에 자문과 외부 근거를 더했다(원문 3쪽).		

2031년

국내 공시에 **스코프3**가 들어오는 해. 공시 의무화는 **2028년**에 시작하고 스코프3만 **3년**이 유예됐다 (III·IV장 5~6면)

291개사

2028년 첫 적용 대상으로 금융위가 예상한 수. 2029년 5조원으로 확대하면 **3,171개사** (III장 5면)

65%

경영진이 환경 지속가능성을 **컴플라이언스 의무**로 본다는 응답 (최대 2개 선택). 성장·가치의 원천은 41% (I장 3면)

59.8%

도내 중소기업이 ESG 도입의 애로로 **자금 부족**을 꼽은 비율. 1위다 (V장 7면)

이번 호 핵심 3줄

- 원문은 중소기업이 공급망을 떠받친다고 적었다.** 원문 12쪽은 농업·에너지·제조·폐기물 관리의 공급망을 중소기업이 떠받치고 있으며 **“existing financing models often do not work well for SMEs”**(기존 금융 모델은 중소기업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적었다. 역량을 대기업 밖 공급사·중소기업까지 넓히는 일이 체계 전반의 진전을 가른다고 덧붙였다(II장 4면).
- 국내 일정은 이미 확정돼 있다.**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와 방안(최종안)」(2026. 7. 8.)은 **2028년(FY27)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예상 291개사에 공시를 의무화한다. **2029년 5조원 이상 3,171개사**로 넓히고 2030년부터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한다. 스코프3는 대상별로 **3년씩 유예**된다(III·IV장 5~6면).
- 요구가 늘 것이라는 예상에 조직의 준비가 못 미친다.** 원문 12쪽에서 기후·자연 보고가 계속 늘 것이라고 본 응답은 **58%**인데, 경영진이 지속가능성을 성장·가치의 원천으로 본다는 응답은 **41%**에 그쳤고 컴플라이언스 의무라는 응답이 **65%**였다. 같은 면이 인용한 2025년 유럽 기업 조사에서는 **54%**가 지속가능성 전략이 핵심 사업 전략과 분리돼 있다고 답했다(I장 3면).

이 호를 왜 보나

- 국내 공시 의무는 **대기업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스코프3는 **협력사의 배출량**을 요구하므로, 2031년 이후 상장사가 낼 서류에는 **협력사가 내준 자료**가 들어간다. 전국 중소기업의 **26.7%**가 경기도에 있다(* 출처 5). 도내 중소기업 900개사 조사에서 ESG 도입의 애로 1위는 **자금 부족 59.8%**다. 인공지능 도입 애로는 1·2순위 합산 기준으로 **사내 체제 미정비가 64.1%**로 가장 높았다(V·VI장 7~8면). 원문이 꼽은 과제와 도내 조사가 집계한 애로는 서로 같은 항목이 아니어서 **나란히만 실었다**.

목차

I·II. 원문이 꼽은 요구와 약한 고리 · 3~4면

III·IV. 국내 공시 일정과 스코프3 · 5~6면

V·VI. 도내 중소기업 900개사 조사 · 7~8면

VII·IX. 측정과 보고·적용·제도 분화 · 9~11면

X·XI. 함께 볼 항목과 일정 · 12~13면 / * 용어·출처 · 14면

이 호를 읽는 법 — 인용은 영문을 먼저 싣고 국문을 병기했다. 원문 보고서의 위치는 **「원문 N쪽」**, 이 브리프의 위치는 **「N면」**으로 적었다. 그림 번호는 각 조사가 붙인 번호이며 도내 조사는 **「같은 조사 그림 N」**으로 갈라 적었다. 원문은 **지역별로 나누지 않았고**(원문 3쪽) 국내 제도를 다루지 않는다 — III·IV장의 제도 서술은 **금융위 최종안을 직접 읽어 올 것**이다. 같은 주 **커스텀 브리프 11호**는 이 원문을 기업 원가의 관점에서 다뤘다.

I 요구는 커지는데 인식은 더 느리다

원문은 대기업 지속가능성 책임자 **103명에게** 2026년 2월 10일부터 3월 18일까지 물었다. 모집단은 WEF Centre for Nature and Climate가 조직한 커뮤니티 **189명**이고 응답은 익명이다(원문 3쪽). 원문 4쪽은 **지속가능성을 기업 전략·투자·운영에 심는 일을 맡은 임원들의 시각을 담는 데** 이 보고서의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수치는 **응답자의 인식을** 잴 값이다. 이 브리프는 원문 PDF 25쪽 전문을 직접 대조했다.

☞ 원문이 스스로 적은 한계 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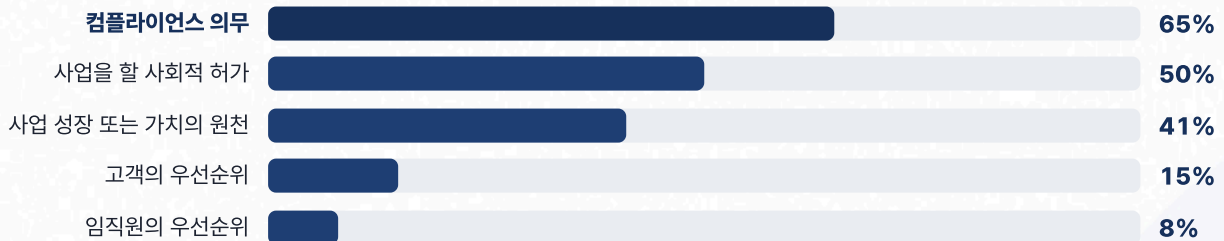
- ① **지역별로 나누지 않았다.** “Questions were framed from a global perspective, and the results are therefore **not disaggregated by region.**” — “문항은 세계 관점에서 구성됐고, 따라서 결과는 **지역별로 나누지 않았다.**” 이 설문값에서 국내 조건을 읽어낼 수는 없다.
- ② **설문 기간 중에 지정학 조건이 바뀌었다.** “On 28 February, during the survey period, geopolitical tensions escalated significantly ... **While this context may have influenced some responses, most participants had completed the survey prior to the conflict.**” — “설문 기간이던 2월 28일에 지정학적 긴장이 크게 높아졌다. ... **이 상황이 일부 응답에 영향을 줬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참여자는 분쟁 이전에 설문을 마쳤다.**”

보고 요구는 늘 것으로 봤다 — 그림의 한 행

문장 (그림 2 · 원문 7쪽 · 응답 103명)	강하게 부동의	부동의	중립	동의	강하게 동의	동의 계
상당히 더 많은 기업이 기후·자연 관련 리스크를 보고하게 될 것	—	17	25	55	3	58%

원문 12쪽 본문도 같은 값을 “**58% of respondents expect climate- and nature-related reporting to continue expanding globally**”로 적고, 영국·일본·튀르키예·브라질·호주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채택·현시화했으며 인도와 중국도 상장기업 대상 규제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이 목록에 없다 — 국내 일정은 III장(5면)에 있다.

그림 6 — 경영진은 환경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최대 2개 선택 · 원문 12쪽)



자료: Chief Sustainability Officers' Survey (March 2026) · 원문 그림 6

문항 지문: “How would you characterize the wa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s perceived by C-suite leaders? (Select up to two)” 두 개를 고르는 문항이라 합계가 179%다. 같은 면이 인용한 2025년 유럽 기업 조사(원문 미주 28)에서는 지속가능성 전략이 핵심 사업 전략과 분리돼 있다는 응답 54%, 완전히 통합됐다는 응답 5%였다 — 원문이 끌어온 외부 값이며 이 설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 같은 설문의 다른 대목 — 공시 확대를 동력으로 보지는 않았다

앞으로 3년간 무엇이 진전을 앞당길지 물었을 때(그림 3 · 최대 3개 선택 · 원문 8쪽) **공시 의무의 확대는 17%였다** — 1위인 사업성 강화 64%, 기술의 비용 하락 56%와 차이가 크다. 제약에서는(그림 4 · 최대 3개 선택 · 원문 9쪽) **정책 역전 또는 일관되지 않은 규제가 68%**로 1위였고 데이터·지표·보고의 표준화 부족은 14%였다. 요구가 늘 것이라고 보면서도 그 요구가 진전을 앞당긴다고는 보지 않았다.

II 원문이 지목한 약한 고리 — 중소기업

원문 2장은 지속가능성이 대출 심사와 제품 설계, 조달, 공급망, 운영 성과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본다. 원문 2장의 첫 절 끝 대목이 중소기업들을 따로 다뤘다. 아래가 원문 11~12쪽에 걸친 그 대목이며, 이 호의 축이 여기서 나왔다.

🔍 원문 11~12쪽 — 중소기업이 공급망을 떠받친다

“The same logic applies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hich underpin supply chains across key sectors such as agriculture, energy, manufacturing and waste management. These companies are often where operational resilience and adaptation are put into practice. Yet existing financing models often do not work well for SMEs, highlighting that the challenge is not just mobilizing capital but building the right financial infrastructure and partnerships to channel investment to the local level.”

국문: “같은 논리가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 농업·에너지·제조·폐기물 관리 같은 핵심 업종의 **공급망을 떠받치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운영 회복력과 적응이 실제로 이뤄지는 곳이 바로 이 기업들이다. 그런데 기존 금융 모델은 **중소기업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과제가 자본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가 현장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금융 구조와 협력 관계를 만드는 일임**을 보여준다.”

☞ 원문이 그 다음에 적은 문장 — 이 호의 축

- “Extending these capabilities beyond large firms to suppliers, SMEs and wider value chains will determine whether commercial momentum translates into system-wide progress.” — “이 역량을 대기업을 넘어 공급사와 중소기업, 더 넓은 가치사슬까지 넓히는 일이 상업적 동력이 체계 전반의 진전으로 옮겨지는지를 가른다.” 원문은 지속가능성이 사업 전략의 참고 항목에서 **전략을 집행하는 방식까지 넓어졌다고** 같은 면에 덧붙였다.

원문이 끌어온 외부 값 — 공급망 관리의 이득

출처 (원문 미주)	원문이 실은 값
CDP 원문 미주 27	공급망 배출량을 적극 관리하는 기업이 이미 136억 달러 를 절감했고, 1,650억 달러 의 추가 재무 편의 가능성이 있다
Capgemini 2025년 기업 조사 · 미주 26	대기업의 62% 가 비용 절감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투자한다고 답했다. 직전 3년간 평균 절감폭은 폐기물 감축 20% , 공급망 비용 17% , 에너지 소비 16%
이 설문 응답 원문 11쪽	응답자들은 물·폐기물·에너지·원자재 사용 을 줄여 비슷한 이득을 얻었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의 상업적 경쟁력과 에너지 가격 변동에 덜 노출되는 효과도 꼽혔다

위 세 줄 가운데 앞의 두 줄은 원문이 인용한 외부 조사이고 마지막 줄만 이 설문의 응답이다. 원문은 둘을 미주로 갈라 놓았고 이 호도 그 구분을 유지했다. 달러 값은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겼으며 원문은 환산 기준을 적지 않았다.

🔍 자금은 적응 투자에서도 첫째 제약이 아니었다

적응 투자를 가장 크게 제약하는 요인도 물었다(그림 13 · 최대 2개 선택 · 원문 19쪽 · 일곱 항목 가운데 여섯). 1~3위는 **불확실한 비용편익 62%**, 경영진의 지지 부족 42%, 짧은 예산 주기 31%다. 물리적 위험 자료 부족이 20%, **적응 투자 금융의 높은 비용·제한된 가용성이 14%**, 규제 장벽이 13%로 낮았다. 원문 19쪽은 그 까닭으로 적응의 편익이 **추가 매출 대신 피한 손실로** 생긴다는 점을 꼽았다. 원문의 첫째 제약은 **비용편익의 불확실성**이고 도내 조사의 1위는 **자금 부족**이다 — 문항이 달라 두 값을 견주지는 않는다(V장 7면).

III 국내 공시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다

원문은 ISSB 기준 채택국으로 영국·일본·튀르키예·브라질·호주를 꼽았고 **한국은 그 목록에 없다**(원문 12쪽). 그러나 국내 일정은 원문이 나오기 두 달 전에 확정됐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8일 공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이 그 문서다. 아래는 그 문서를 직접 읽어 옮긴 것이며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항목	금융위 최종안이 적은 내용
시행	2028년(FY27)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 로 즉시 시행
공시 시점	재무제표와 동시에 사업보고서에 포함해 공시
공시 기준	기후공시를 우선으로 하는 한국형 기준(KSSB) 제정
제3자 인증	공시 의무화 2년 뒤인 2030년부터 의무화
면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를 면제 . 자산·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첫해에 한해 공시범위에서 제외

단계별 대상과 예상 기업 수

공시 연도	대상 (연결자산총액)	예상 기업 수	스코프3 적용
2028년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91개사	3년 유예 → 2031년
2029년	5조원 이상으로 확대	3,171개사	3년 유예 → 2032년
2030년	2조원 이상까지 추가 확대 검토	최종안에 적히지 않음	3년 유예 → 2033년

2030년 칸은 「**검토**」로 적혀 있어 확정이지 않으며 기업 수도 나오지 않는다. 2028년과 2029년의 기업 수는 **금융위가 적은 예상치이며** 상장사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2030년에는 확대 검토와 제3자 인증 의무화가 겹친다**.

☞ 면책 조항 — 최종안이 적은 두 단계

- ① 도입 초기 3년. 제도의 안착과 적극적인 공시를 위해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한다고 적었다.
- ② 그 이후. 면책 대상은 셋이다 — 미래 리스크 예측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추정 정보, 「**협력업체 등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합리적인 근거·판단을 전제로 충실하게 공시한 경우로 한정했다.

💡 면책 조항이 전제한 자료 수집 — 이 브리프의 읽기다

②의 문장에서 제도는 **협력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오는 일을 미리 전제했다**. 상장 대기업이 스코프3를 산정하려면 **협력사의 배출량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의 불확실성을 어디까지 책임질지를 최종안이 미리 정해 두었다. 그 자료 요청을 실제로 받는 기업은 **IV장 (6면)**에서 본다.

IV 스코프3 — 요구가 협력사에 미치는 단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셋으로 나뉜다. **스코프1**은 기업이 직접 태운 연료, **스코프2**는 사 온 전기·열, **스코프3**는 그 바깥의 가치사슬에서 나온 배출량이다. 원재료를 만든 협력사, 제품을 실어 간 물류, 판매된 제품이 쓰이는 동안의 배출량이 모두 여기 들어간다. **상장 대기업이 스코프3를 공시하려면 협력사의 배출량을 알아야 한다** — 공시 의무가 공급망으로 전달되는 대목이 이 한 문장이다.

공시 연도	스코프1·2	스코프3 (가치사슬 배출량)
2028년(FY27)	10조원 이상 코스피 291개사	— (3년 유예)
2029년	5조원 이상 3,171개사	— (3년 유예)
2030년	2조원 이상 확대 검토 · 제3자 인증 의무화	— (3년 유예)
2031년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적용 시작
2032년		5조원 이상으로 확대
2033년		2조원 이상 (2030년 확대가 이뤄질 경우)

출처는 모두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2026. 7. 8.)이다. 스코프3는 공시대상별로 3년씩 유예되므로 각 단계의 시작 연도에 3을 더한 해부터 적용된다.

어디까지 미치는가 — 최종안이 적은 조건

조건	최종안의 내용과 그 결과
자료 요청을 받는 기업	공시 의무를 지는 상장사의 가치사슬 안에 있는 기업 . 최종안의 면책 조항이 「 협력업체 등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를 적어 그 수집을 전제했다(III장 5면)
공시 의무를 지는 기업	연결자산총액 기준을 넘는 상장사 본인 . 비상장 중소기업이 직접 공시 서류를 내는 일정은 최종안에 없다
면제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 . 최종안은 「고탄소 배출 업종」의 범위를 이 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

세 줄의 구분이 이 호의 요지이고 표제가 여기서 나왔다 — 공시 서류를 내는 일과 그 서류에 들어갈 자료를 내주는 일은 성질이 다르다. 뒤의 일에는 최종안이 부과하는 의무가 없고 요청이 거래 관계를 따라 전달된다. 대기업의 공시가 중소기업의 숙제가 되는 지점이 여기도. 이 구분은 두 문서에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이 브리프의 정리다.

🔍 원문도 자료가 어디서 오는지 적었다

원문 17쪽은 지속가능성 데이터가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적었다 — “**sustainability data is often fragmented across operational systems, supplier disclosures and sensors**”(지속가능성 데이터는 운영 시스템과 **공급사 공시**, 센서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원문 응답자 **48%**는 인공지능 도입의 주요 장벽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모자란다는 점을 꼽았다(원문 17쪽). **30%**는 부정확한 모델이나 저품질 데이터로 잘못된 결정이 나올 위험을 들었다(그림 10 · 최대 3개 선택 · 원문 16쪽). 공급사가 내주는 숫자의 품질이 **대기업 공시의 품질을 함께 정한다**.

V 도내 중소기업은 공급망 안에 있다

원문이 지목한 약한 고리와 국내 제도가 정한 일정이 만나는 곳을 짚으려면 **도내 중소기업이 공급망의 어디에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아래는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표본 **900개사**)의 값이다.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업종별·매출액 규모별로 층화추출해 2025년 **8월 1주부터 10월 4주까지** 조사했고, 2019년 조사(1,522개사)와 시계열로 견줄 수 있게 설계했다. **이 조사의 발행처는 이 브리프의 발행처와 같은 기관이다**(* 출처 5).

거래 단계 — 응답기업 900개사의 매출 구조



자료: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2025) · 같은 조사 그림 1·2 · 첫 행은 900개사의 매출 구성비, 둘째 행의 모수는 B2B 매출이 있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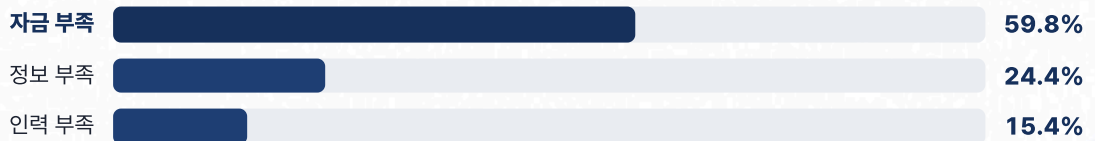
둘째 줄의 **「1차 협력업체」**는 위탁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단계를 말한다. 원 보고서는 이 구조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이 **「대기업 및 주요 발주처와의 공급망 체계에 크게 의존」**한다고 적었다. **스코프3 자료 요청이 거래 관계를 따라 전달된다면 이 단계가 첫 접점이다**(IV장 6면).

그런데 ESG 도입은 아직 계획 단계 밖에 있다

ESG 경영 도입 의사 (900개사)	응답 비중
계획 없음	69.6%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향후 도입 의사 있음	24.4%
현재 추진 중	4.4%

원 보고서는 이 세 칸을 싼고 **도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을 「아직 초기 단계」**로 봤다. 세 값의 합은 **98.4%**이며 나머지 칸의 내용은 같은 조사 그림 24에 적혀 있지 않다.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로는 **지속가능경영이 97.4%**였다 — 이 값의 모수는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며 전체 900개사가 아니다.

ESG 도입 과정의 애로사항



자료: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2025) · 같은 조사 그림 26

세 값의 합이 **99.6%**이므로 **하나만 고르는 문항으로 보인다**. 원 보고서는 이 문항의 모수를 따로 적지 않았다. **「정보 부족 24.4%」와 앞 표의 「도입 의사 있음 24.4%」**는 다른 문항의 값이다 — 두 값이 같아 섞이기 쉽다. 원 보고서는 이 결과를 **「인식과 관심에 비해 추진할 자원과 실행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정리했다.

이 조사는 공시 제도를 묻지 않았다. 문항은 ESG 경영 도입 여부와 애로사항이고, 조사 시점은 금융위 최종안이 나오기 약 9개월 전인 **2025년 가을이다**. 따라서 위 값은 공시 요구에 답한 결과가 될 수 없고 **그 요구를 받기 전의 준비 상태다**.

VI 두 조사를 나란히 읽으면

왼쪽은 대기업 지속가능성 책임자 103명에게 2026년 2~3월에 물은 값이고, 오른쪽은 경기도 중소기업 900개사에 2025년 8~10월에 물은 값이다. 두 조사는 같은 항목을 켜 적지 않다 — 모집단도 문항도 시점도 다르다. 그래서 이 표는 수치를 견주지 않고 항목만 짚었다. 견줄 수 있는 것은 양쪽이 같은 주제에서 꼽은 항목의 종류다.

같은 주제	원문 — 대기업 책임자 103명	도내 조사 — 중소기업 900개사 표본(칸마다 문항과 모수가 다르다)
지속가능성을 보는 눈	경영진이 컴플라이언스 의무로 본다 65%, 성장·가치의 원천으로 본다 41% (그림 6)	ESG 경영 도입 계획 없음 69.6%.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꼽은 이유는 지속가능경영 97.4%
돈의 문제	적응 투자의 제약 1위는 불확실한 비용편익 62%. 금융의 비용·가용성은 14% (그림 13)	ESG 도입 애로 1위는 자금 부족 59.8%. 정보 부족 24.4%, 인력 부족 15.4%
자료와 기준	진전을 막는 요인으로 데이터·지표·보고의 표준화 부족을 꼽은 응답 14% (그림 4)	ESG 도입 애로 둘째가 정보 부족 24.4%
인공지능	인력의 기술·역량이 제약이 될 것 68%(그림 8 · 원문 14쪽), 신뢰할 데이터셋 부족이 장벽 48%(원문 17쪽)	AI 도입 애로 사내 체제 미정비 64.1%, IT 인프라 부족 49.6%, 전략 수립 29.7% (1·2순위 합산)
보고 요구의 전망	기후·자연 보고가 계속 늘 것 58%(그림 2 · 원문 7쪽 · 같은 값을 원문 12쪽 본문이 서술)	해당 문항이 없다. 조사 시점이 금융위 최종안보다 앞선다

도내 조사의 AI 애로 값은 1·2순위를 합산한 기준이라 합계가 100%를 넘고, ESG 애로 값은 합이 99.6%여서 단일 응답으로 보인다. 두 기준이 다르므로 같은 표 안에서도 두 줄을 견주지 않는다. 「IT 인프라 부족」은 1순위 응답이 3.3%였고 1·2순위 합산에서 49.6%로 올라간 항목이다 — 원 보고서는 이를 가장 중요한 현안은 아니되 도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로 적었다.

두 조사가 겹친 대목과 어긋난 대목

☞ 같은 방향

- 필요성 인식이 실행 기반보다 높다. 원문 12쪽은 사업적 근거는 강해지는데 조직의 인식은 “evolving more gradually”(더 느리게 바뀌고 있다)라고 적었고, 도내 조사는 ESG-AI-사업전환 모두에서 필요성 인식은 높으나 실행 기반이 부족하다고 정리했다.
- 자료의 품질이 양쪽 모두의 제약이다. 원문은 데이터가 운영 시스템과 공급사 공시, 센서에 흩어져 있다고 적었고(원문 17쪽), 도내 조사의 둘째 애로는 정보 부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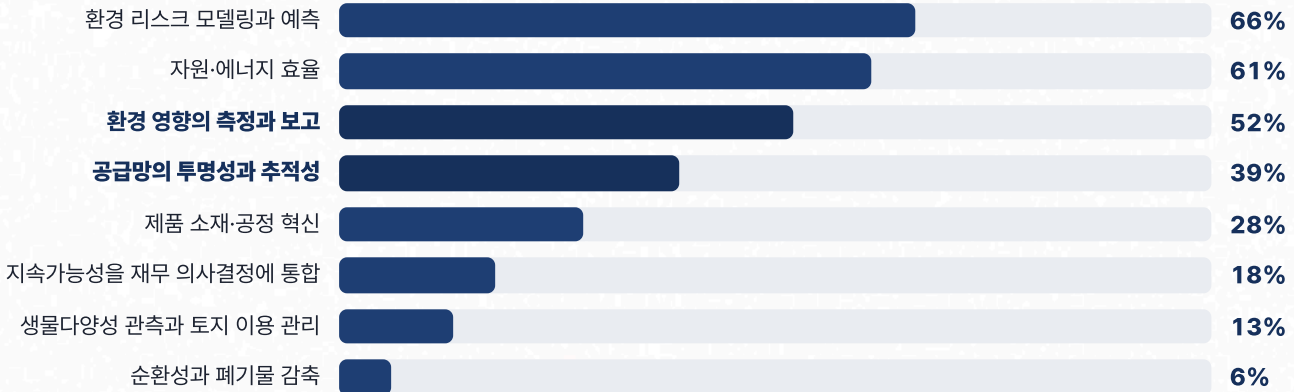
🔍 어긋난 대목 — 자금이 서로 다른 문제다

왼쪽에서 자금은 편익을 계산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 적응 투자를 막는 1위가 불확실한 비용편익(62%)이고 금융의 비용·가용성은 14%에 그쳤다. 오른쪽에서 자금은 조달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 1위가 자금 부족(59.8%)이다. 원문 12쪽이 적은 “existing financing models often do not work well for SMEs”가 이 갈림과 같은 내용이다(II장 4면).

VII 측정과 보고 — 원문이 인공지능에 기대한 영역

원문 3장은 인공지능을 “an execution layer”(실행 레이어)라 불렀다(원문 16쪽).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정하거나 사업 모델을 바꾸는 일보다 **전략이 집행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역할이 있다고 적었다(원문 15쪽). 아래 그림에서 보고와 공급망에 걸친 칸이 국내 일정과 맞물린다 — **2030년부터 제3자 인증이 의무화되고 2031년에 스코프3가 들어오기 때문이다**(III·IV장 5~6면).

그림 9 — 앞으로 3년, 인공지능이 가장 크게 기여할 영역 (최대 3개 선택 · 원문 15쪽)



자료: Chief Sustainability Officers' Survey (March 2026) · 원문 그림 9 · 최대 3개 선택이라 합계가 100%를 넘는다

원문이 꼽은 쓰임 — 조직과 공급망에 걸친 정보

“Respondents highlighted particular potential in emissions measurement, automated reporting and forecasting, where AI can improve the speed, quality and auditability of sustainability information across organizations and supply chains.” 국문: “응답자들은 배출량 측정과 자동화된 보고·예측에서 특히 가능성이 크다고 꼽았는데, 여기서 인공지능은 조직과 공급망에 걸친 지속가능성 정보의 속도와 품질, 그리고 감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원문이 쓴 ‘감사 가능성 (auditability)’은 국내 일정의 **2030년 제3자 인증 의무화**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 — 다만 원문은 국내 제도를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 연결은 이 브리프가 지었다.

그 전에 막히는 조건 — 사람과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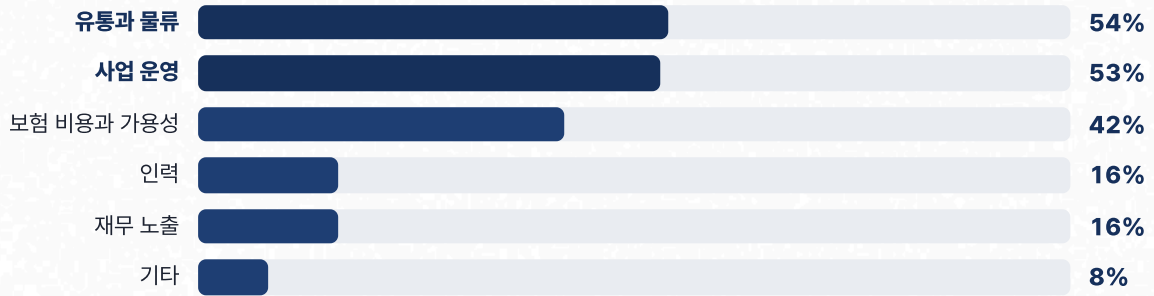
원문이 적은 제약	응답 비중	원문 위치
인력의 기술·역량 격차가 큰 제약이 될 것 (동의 계 55+13)	68% 본문은 「70%에 가깝다」	그림 8 · 14쪽 서술은 17쪽
인공지능 도입·개발의 장벽으로 기술 인력 부족	약 50%	원문 17쪽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셋의 부족	48%	원문 17쪽
부정확한 모델·저품질 데이터로 인한 잘못된 결정	30%	그림 10 · 16쪽

둘째 줄은 원문이 ‘half’로 적은 값이어서 근삿값으로 옮겼다. 원문 17쪽은 이 결과가 2장의 결과와 어긋난다고 적었다 — 2장에서는 노동시장 제약이 지속가능성 진전의 주요 장벽으로 널리 꼽히지 않았는데, 인공지능에서는 별도의 역량 수요가 드러났다. 3장을 닫는 문장은 “AI should be treated as an **accelerator of sustainability capability rather than a substitute for sustainability strategy**”(인공지능은 지속가능성 전략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량을 가속하는 것으로 다뤄야 한다)였다.

VIII 적응 — 가치사슬의 취약 구간

원문 4장은 적응을 **사업 연속성·리스크 관리·자본 배분**의 문제로 놓았다. 국내 공시에서 이 장이 중요한 까닭은 **물리적 위험이 기후공시의 항목이고** 국내 기준도 기후공시를 먼저 의무화하기 때문이다(III장 5면). 어느 구간이 취약한지를 숫자로 답할 수 있는지가 그 서류의 내용이 된다.

그림 12 — 기후·자연 충격에 가장 취약한 가치사슬 구간 (최대 2개 선택 · 원문 18쪽)



자료: Chief Sustainability Officers' Survey (March 2026) · 원문 그림 12

원문 18쪽은 **원자재 가용성**도 되풀이되는 우려로 적고, 지역별 동인을 유럽 **인프라 회복력**, 미국 **보험료 상승**, 신흥시장 식량 안보·민간 투자로 갈랐다. 도내 조사에서 수출기업은 **900개사 가운데 108개사(12.0%)**였고 나머지는 내수 기업이다(V장 7면). 위 그림의 앞 두 칸은 수출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발주처로 가는 납품 일정**에도 영향을 준다.

그림 11 — 적응의 우선순위와 자금, 세 문장 · 원문 18쪽

문장	강하게 부동의	부동의	중립	동의	강하게 동의
앞으로 3년간 적응이 세계 환경 지속가능성의 더 큰 초점이 될 것	—	4	12	54	30
민간 부문 투자가 적응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	—	3	20	58	18
적응에 집중하면 완화(mitigation)에서 관심과 자원이 빠져나갈 것	3	24	40	25	8

동의 계는 차례로 **84% · 76% · 33%**이다. 앞의 두 값을 원문 본문은 **85%와 77%**로 적었다. 구간별 백분율을 각각 반올림한 뒤 더하면서 생긴 차이로 보이며 원문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 호는 그림 값을 싣고 본문 값을 함께 달았다.

☞ 원문이 끌어온 외부 근거 넷

- **MSCI 2025 기업 회복력 조사** — 조사 대상 기업 거의 전부가 이미 **극한기상 노출을 평가하고 있고**, 많이 꼽힌 위험은 강한 폭풍·홍수·극한 더위였다(미주 49).
- **국제통화기금(IMF) 연구** — 기상 충격이 **세계 공급망을 타고 번지는 일이 늘고 있으며**, 농업처럼 노출이 큰 업종의 교란이 생산·유통망 전반에 미친다(미주 50·51).
- **2026년 초 스페인 일부와 북아프리카의 홍수** — 유럽 시장에 공급하는 **농업 공급망이 끊겨** 그 영향이 더 넓은 생산·식품 유통망으로 퍼졌다(미주 52).
- **보험** — 2022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일곱 개 보험사가 재물보험 인수를 중단했다**(미주 55). 원문 20쪽은 민간 자본이 저절로 늘지는 않는다고 적고 **투자 가능한 기회, 더 분명한 수익·상환 모형, 위험 분담 장치, 민간 협력을** 함께 들었다.

IX 제도는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국내 일정이 정해졌다고 해서 기업이 맞춰야 할 기준이 하나로 줄지는 않는다. 원문 10쪽은 이 국면에 **“green divergence”(녹색 분화)**라는 이름을 붙이고 **“Rather than converging on a single model, countries are pursuing distinct pathways that reflect their own priorities and comparative advantages.”**(하나의 모형으로 수렴하기보다 각국이 저마다의 우선순위와 비교우위를 반영한 경로를 따르고 있다)로 요약했다. 아래는 원문이 **각국이 저마다 다른 길을 간다며 든 사례이며 이 브리프의 평가가 아니다.**

관할	원문이 적은 내용
미국	기후 정책의 방향이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달라져 장기 우선순위에 불확실성이 생겼다(미주 11)
유럽	정책의 규모는 여전히 크되 산업 경쟁력·소비자 비용·에너지 안보 를 기준으로 논의된다 — 2035년 비전기차 판매 금지안 조정, 에너지 위기 국면의 메탄 규제, EU 삼림파괴규정 이행 연기 (미주 12·13)
캐나다	폭넓은 기후 약속은 유지하면서 탄소세와 화석연료 배출 상한을 축소했다(미주 14)
중국	2024년 6,250억 달러 를 넘는 투자로 2030년 풍력·태양광 설비 목표를 6년 앞당겨 달성했다. 전력망 안정을 위해 석탄에도 기댔고, 그 석탄이 2023년 발전의 60%에 가까웠다 (미주 15·16)
인도	2024년 비화석 발전설비 비중 44% (미주 21)
동남아	모멘텀이 청정에너지 제조와 핵심광물로 이어지고 있다(미주 22)

미국·유럽·캐나다·중국은 원문 9쪽, **인도와 동남아**는 원문 10쪽이다. 원문은 중동·북아프리카(물 안보·회복력 인프라·지속가능금융)와 아프리카 일부(냉방 수요 증가)도 같은 자격으로 들었다 — **이 표는 원문이 든 여덟 가운데 여섯만 옮겼다.** 원문 10쪽은 응답자들이 **아시아 전역의 재생에너지·청정기술 확산을** 과소평가된 변화로 거듭 꼽았다고 덧붙였다.

㉠ 이 분화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방식 둘 — 이 브리프의 정리다

- ① **거래 상대의 기준.** 원문 12쪽은 ISSB 기준을 채택·현지화한 나라로 **영국·일본 등 다섯 나라**를 적고 인도·중국도 상장기업 대상 규제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기준(KSSB)과 이들 기준은 같은 국제 기준에서 갈라져 나오지만 **현지화의 내용이 같지는 않다.**
- ② **수입국의 제도 일정.** 유럽 줄에 적힌 **EU 삼림파괴규정 이행 연기가** 그 예다 — 원문은 이를 각국이 서로 다른 경로를 따르는 사례로 들었다(미주 13). 적용 시기가 달라지면 **수출 거래에 요구되는 서류의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

🔗 원문이 이 절에서 다시 인용한 설문 값과 마지막 문장

원문 10쪽은 설문 값 둘을 또 인용했다. 상업적 이득이 업종·시장 간에 **고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85%**(원문 표기는 「4분의 3이 넘는다」), **신흥시장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64%**(「약 3분의 2」)다. 다음 단계를 가를 요인으로는 **전력망, 인허가, 공급망, 감당 가능한 금융**을 꼽았고, 절을 이렇게 닫았다 — **“Green divergence should not be confused with declining ambition.”**(녹색 분화를 야심이 줄어드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도내 중소기업은 ①을 먼저 만난다. 애로실태 조사에서 수출기업은 900개사 가운데 **108개사(12.0%)**였고, 향후 주력할 경영계획으로 **국내 판로개척**을 꼽은 응답이 **71.6%**로 가장 높았다(* 출처 5). 해외 제도의 분화를 직접 받는 기업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국내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로 같은 기준을 만난다.**

X 문서에 적힌 일정과 비어 있는 항목

여기까지는 두 문서를 옮겼다. 아래는 이 브리프의 정리이며 두 문서에 없는 판단이다. 공시 제도를 두고 지금 말할 수 있는 내용과 아직 문서에 없는 내용을 나눈다.

문서에 날짜와 수로 적힌 것	아직 문서에 적히지 않은 것
공시 시작 2028년(FY27) , 10조원 이상 코스피 291개사	2030년 2조원까지 확대 가 이뤄질지와 그때의 기업 수
2029년 5조원 으로 확대, 3,171개사	면제 기준인 「 고탄소 배출 업종 」의 범위
스코프3 는 공시대상별 3년 유예 → 2031년 시작	스코프3 산정에 어떤 항목을 어느 양식으로 받을지
2030년부터 제3자 인증 의무화	인증 대상에 스코프3가 들어오는 시점
도입 초기 3년간 포괄 면책 , 이후 협력업체 등 제3자 수집 정보에 대한 면책	협력사가 자료를 내줄 때 그 비용을 누가 지는지

왼쪽은 금융위원회 최종안(2026. 7. 8.)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고, 오른쪽에는 그 문서에서 찾을 수 없는 항목을 이 브리프가 모았다. 오른쪽의 상당 부분은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이 확정되면 정해진다.

정책을 검토할 때 함께 볼 다섯 항목

- **Q1.**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공시 의무 대상 상장사의 1차 협력업체인 곳은 몇 곳인가? → 애로실태 조사는 B2B(1·2차 벤더) 매출 비중 **63.1%**와 B2B 매출이 있는 기업의 **91.8%**가 1차 협력업체라는 데까지 실었으나 거래처가 공시 대상인지는 묻지 않았다(Ⅶ장 7면).
- **Q2.** 면제가 걸리는 규모는 어디부터인가? → 최종안의 면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경우에만 걸린다(* 출처 5). 면제는 공시 서류를 내는 의무에 걸리고, 자료 요청은 거래 관계로 전달된다(Ⅳ장 6면).
- **Q3.** 2031년에 요청될 자료의 항목과 양식은 언제 확정되는가? → 항목과 양식은 KSSB 기준이 정하고, 최종안은 기후공시 우선만 적었다(Ⅲ장 5면). 확정 시점이 최종안에 없어 요청이 오는 시점과의 간격은 아직 알 수 없다.
- **Q4.** 협력사의 배출량 산정 역량을 쟁 조사가 있는가? → 도내 조사는 ESG 경영 도입의 애로(자금 59.8% · 정보 24.4%)까지만 물었고 배출량 산정 역량은 문항에 없다(Ⅴ장 7면). 원문 12쪽이 적은 과제도 자원을 모으는 일에서 끝나지 않는다(Ⅱ장 4면).
- **Q5.** 인증 의무화(2030년)와 스코프3 시작(2031년) 사이의 1년에 무엇이 겹치는가? → 2030년에는 2조원 확대 검토와 인증 의무화가 함께 놓이고, 이듬해에 협력사 자료가 들어온다(Ⅳ장 6면).

위 다섯 항목은 이 브리프가 두 문서를 대조해 만든 질문이며, 원문과 금융위 최종안 어느 쪽도 이 질문을 달지 않았다. 이 브리프는 특정 정책 수단을 제안하지 않는다 — 수치와 일정의 출처를 밝히는 데까지가 이 문서의 역할이다. 인용한 두 조사는 응답자의 인식을 쟁 값이다.

초안과 최종안 사이의 변경 사항

구분	의견수렴안 (2026. 2. 25.)	최종안 (2026. 7. 8.)
2028년 대상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조원 이상 — 예상 291개사
다음 단계	2029년부터 10조원 이상 으로 단계적 확대	2029년 5조원 (3,171개사) · 2030년 2조원 검토

의견수렴안은 2026년 2월 25일에 공개돼 3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았고, 7월 8일 최종안이 2028년 적용 기준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적으면서 예상 대상을 291개사로 함께 실었다. 2월 자료의 30조원·10조원 수치를 지금 인용하면 대상 범위를 좁게 잡게 된다(* 출처 4).

XI 앞으로 보게 될 날짜와 문서

확정 일정과 그 해에 정해지는 항목

시점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때 확인할 것
최종안 이후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제정 — 기후공시 우선	스코프3 항목과 양식. 확정 시점은 최종안에 적히지 않았다
2028년 (FY27)	10조원 이상 코스피 291개사 가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와 동시에 공시	첫 서류에 스코프1·2가 어떻게 적히는지. 포괄 면책 3년의 첫 해다
2029년	5조원 이상으로 확대 — 3,171개사	대상 기업이 열 배를 넘으면서 협력사에 가는 자료 요청도 늘어난다
2030년	제3자 인증 의무화 · 2조원까지 확대 검토	인증 범위. 포괄 면책 3년이 끝나는 해이기도 하다
2031년	스코프3 적용 시작 (10조원 이상) — 가치사슬 배출량	협력사가 내주는 숫자가 서류에 들어간다 (IV장 6면)
2032·2033년	스코프3가 5조원 — 2조원으로 확대	2033년은 2030년 확대가 이뤄질 경우에 해당한다

모두 금융위원회 최종안(2026. 7. 8.)에 적힌 일정이다. **‘검토’로 적힌 칸은 확정이지 아니며 포괄 면책의 3년은 시행 첫 해부터 센 기간이다.**

이어서 볼 문서 — 같은 달 WEF가 낸 인접 문서

발간	문서	이 호의 어느 대목 다음인가
2026.9.21	Data Centre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A Decision Playbook for AI Infrastructure	VII장 9면 — 인공지능의 전력·자원. 발간물 페이지는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투자 7조 달러 , 전력 수요 연 최소 20% 증가로 적었다
2026.9.23	Addressing Insurability: A Playbook for Investing in Place-Based Resilience	VIII장 10면 — 보험 비용·가용성 42%와 캘리포니아 사례
2026.9월	Workforce Heat Resilience: An Actionable Framework to Close the Execution Gap	VIII장 10면 — 적응이 사업 연속성의 문제로 옮겨 온 대목
2026.9월	The Resilience-to-Growth Circularity Playbook for Industrial Solutions and Manufacturing	VII장 9면 — 그림 9에서 순환성·폐기물 감축이 6%로 가장 낮았던 칸

위 네 건은 원문이 후속 문서로 지목한 것이 아니다. 같은 기관이 같은 달 열린 **지속가능개발 임팩트 회의(2026. 9. 21.~24., 뉴욕)** 기간에 낸 인접 문서를 이 브리프가 모았다. 발간일은 각 발간물 페이지의 표기를 따랐고, 날짜가 ‘9월’로만 적힌 둘은 페이지에 일자가 나오지 않았다.

☞ 두 원문을 직접 받는 곳

- WEF **‘Chief Sustainability Officers’ Outlook** (25쪽, 영문) — weforum.org 발간물 페이지. 이 브리프가 옮긴 그림 번호는 원문이 붙인 번호와 같다.
-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2026. 7. 8.) — fsc.go.kr 보도자료. **2026년 2월 25일** 보도자료의 초안과 수치가 다르므로 최종안을 받아야 한다.
- 주소는 ***출처(14면)**에 달았다 — 도내 조사는 발간물 번호로만 실었다.

* 용어 설명

스코프1·2·3(Scope 1·2·3) — 온실가스 배출량의 구분. **스코프1**은 직접 태운 연료, **스코프2**는 구매한 전기·열, **스코프3**는 협력사의 생산과 물류, 판매된 제품의 사용 단계를 포함한 가치사슬 배출량이다. 국내 일정에서 스코프3만 **3년 유예된다**(IV장 6면).

연결자산총액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로 묶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자산 합계. 금융위 최종안이 공시 대상을 가르는 기준으로 쓴 값이다 — **2028년 10조원, 2029년 5조원, 2030년 2조원 검토**(III장 5면).

KSSB(한국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기준 —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의 기준. 최종안은 **기후공시를 우선으로** 하는 한국형 기준 제정을 적었고, 스코프3의 항목과 양식이 여기서 정해진다.

제3자 인증(assurance) — 공시 정보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는 절차. 최종안은 의무화 시점을 공시 **2년 뒤인 2030년으로** 정했다.

면책 — 공시 내용에 잘못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장치. 최종안은 **도입 초기 3년간 포괄 면책**을 두고, 그 뒤로는 예측·추정 정보와 **「협력업체 등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한해 면책한다고 적었다(III장 5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되는 중소기업의 하위 범주. 최종안의 공시 면제는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경우에 걸리며, **「고탄소 배출 업종」의 범위는 최종안에 적히지 않았다**(X장 12면).

1차 협력업체 — 위탁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공급사. 도내 조사에서 B2B 매출이 있는 기업의 **91.8%**가 이 단계였다(V장 7면).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SO,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 기업에서 환경·지속가능성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 원문 4쪽은 그 소관으로 재무·보고, 조달, 기술, 투자자 관계, 인권을 꼽았다.

아웃룩(Outlook) — WEF가 특정 집단의 인식을 정기적으로 재어 내는 보고서 형식. 이번이 **창간호(inaugural)**다.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만드는 국제 기구. 원문 12쪽은 채택·현지화한 나라로 영국·일본·튀르키예·브라질·호주를 꼽았다.

녹색 분화(green divergence) — 원문 10쪽이 이번 국면에 붙인 이름. 업종·시장·지역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여 진전이 고르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 — 완화는 배출을 줄여 원인을 다루는 일, 적응은 이미 일어나는 물리적 영향에 견디도록 설비·공급망·운영을 바꾸는 일이다. 원문 4장의 주제는 적응이다.

실행 레이어(execution layer) — 원문 16쪽이 인공지능의 현재 역할을 부른 말. 정해진 목표를 더 나은 정보·운영 판단·자원 사용으로 옮기는 층을 말한다.

사업을 할 사회적 허가(social licence to operate) — 기업이 사업을 이어 가도록 지역사회와 여론이 용인하는 상태. 원문 12쪽 그림 6의 보기 가운데 하나이며 **50%**가 끝났다(I장 3면).

복수응답(Select up to two/three) — 응답자가 보기 가운데 둘 또는 셋까지 고르는 문항. 합계가 100%를 넘는다. 이 호에서는 그림 3·4·6·9·10·12·13과 도내 조사의 AI 애로 값이 해당한다.

동의 계 — 5점 척도 문항에서 '동의'와 '강하게 동의'를 더한 값. 그림 2와 8은 표 안에, 그림 11은 표 아래에 달았다.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 이 호의 도내 값 출처. 2025년 8~10월에 경기도 소재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 **900개사**(제조 694·서비스 206)를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층화추출로 조사했고, 2019년 조사(1,522개사)와 시계열로 견줄 수 있게 설계했다. 같은 보고서는 **전국 중소기업의 26.7%**를 경기도 소재로 집계했다.

출처

1. World Economic Forum, 「Chief Sustainability Officers' Outlook」, Insight Report, 2026년 9월, 25쪽 (Centre for Nature and Climate). 이 호가 인용한 원문 쪽 — 2·3·4·7·8·9·10·11·12·14·15·16·17·18·19·20·21쪽.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chief-sustainability-officers-outlook-september-2026/>
2. 같은 보고서 「Contributors」(원문 21쪽) — 운영위원회 11명의 소속으로 적힌 기관: First Abu Dhabi Bank, Heidelberg Materials,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Standard Chartered, Amazon, Microsoft, Ant Group, DSM-Firmenich, Envision Group, Mahindra Group, Volkswagen.
3. World Economic Forum 보도자료, 「Chief Sustainability Officers Say Commercial Momentum Will Drive Climate Progress」, 2026. 9. 15. — 조사 기간·표본 확인에 사용.
<https://www.weforum.org/press/2026/09/>
4.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2026. 7. 8. — III·IV·X·XI장(5~6면·12~13면) 제도 서술의 근거. 2026. 2. 25. 보도자료의 초안과 대상 기준·수치가 다르다.
<https://www.fsc.go.kr/no010101/87280>
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GBSA Policy Focus Vol.09, 2025년 12월, ISSN 2671-681X, 22쪽). 원자료는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표본 900개사). 이 브리프의 발행처와 같은 기관이 낸 자료다.
6. World Economic Forum, 「Data Centre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A Decision Playbook for AI Infrastructure」, 2026. 9. 21. — 13면 인접 문서 표.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data-centre-sustainability-and-resilience-a-decision-playbook-for-ai-infrastructure/>
7. World Economic Forum, 「Addressing Insurability: A Playbook for Investing in Place-Based Resilience」, 2026. 9. 23.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addressing-insurability-a-playbook-for-investing-in-place-based-resilience/>
8. World Economic Forum, 「Workforce Heat Resilience: An Actionable Framework to Close the Execution Gap」 · 「The Resilience-to-Growth Circularity Playbook for Industrial Solutions and Manufacturing」, 2026년 9월 — 발간물 사이트맵에서 확인.
<https://www.weforum.org/sitemap/publications/>

저작권에 관하여

원문 2쪽의 고지는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모든 권리가 유보되며 어떤 형태·수단으로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다)라고 적었다. 저작권은 World Economic Forum에 있다(© 2026). 이 브리프는 원문을 복제하지 않았다. 각 장의 논지와 핵심 수치를 정리하고 일부 문장을 출처와 함께 인용했다. 전체 내용은 위 주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같은 고지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WEF가 촉진·승인한 협업 과정의 결과물이며 WEF나 그 회원사·파트너 전체의 견해를 반드시 나타내지는 않는다.

알려드립니다

이 호의 도표는 원문과 도내 조사의 값을 받아 직접 작도한 것이며 원 도표를 복제하거나 개작하지 않았습니다. 막대 길이는 응답 비중(%)에 비례하며 복수응답 문항은 합계가 100%를 넘습니다. 수치와 제도 서술의 확인 시점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이 브리프의 시사점은 공개 자료에 근거한 정리로, 특정 기관의 확정 계획이나 정책 제안이 아니며 투자·경영 판단의 근거로 쓰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호의 기업·관할 사례는 원문에서 옮겼으며, 특정 기업·제품·금융상품에 대한 소개, 추천, 평가나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료 조사와 초안 정리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조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원문에서 가져온 수치·문장은 원문 PDF와, 제도 서술은 *출처 4와, 도내 값은 *출처 5와 대조했습니다.